

2023년 7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안지연	7/2	[뉴스리뷰] 2,800억원 들었는데...오류 속출한 4세대 나이스 [뉴스현장]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영아들...출생미신고 아동 조사 속도	
김홍태	7/9	[뉴스1번지] '냉장고 아기사신' 친모 살인죄 송치...남편은 무혐의 [뉴스프라임]시급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일부 논란도 지속	
박세진	7/16	[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500일 목전...프리고진, 러시아 활보 [뉴스포커스] 군 "북한 정찰위성 인양...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 어"	
안지연	7/23	[뉴스특보] 또 지하철도 참사...대응 시스템 붕괴 '인재' [뉴스특보] 수인성 감염병·알레르기 주의...집중호우 속 건강은?	
임윤주	7/30	[뉴스 리뷰]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정비"...'교원 면책권' 험받나 [뉴스 리뷰]폭우에 실려온 '300톤 쓰레기'...어민들 "생계 막막"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3 7/2(일)	안지연	최근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대체 방안들과 문제점 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교육 행정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23일 뉴스리뷰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가 개통 이후 잇달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나이스를 통해 문서를 인쇄하면 타 학교의 시험 정답지가 출력되고 로그인 정보 등에도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스템 안정화를 목표로 6월 30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6일 보도에서도 4세대 나이스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답안 인쇄 기능 이용 시 다른 학교 시험 답안이 출력되는 등의 오류가 10건 이상 접수되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전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 기밀고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새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행정역량을 당분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는 기밀고사와 학기말 성적 처리 기간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많은 학교들은 시험지 유출되어 문제를 재출제하는 등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우려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방향 중이 아닌 학기 중에 도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 교육부의 입장이 함께 다뤘다면 보도 내용이 더욱 풍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이에 대한 보도를 할 때에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내용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세대 나이스 오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부는 안정화 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 초기 때와 달리 현장에서도 추가 문제 제기 등은 크게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주시하면서 문제를 점검하는 보도 검토 예정입니다.

2023 7/9(일)	김홍태	지난 달 30일 뉴스 01에서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이 오픈AI가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인터넷상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내용으로 소 제기가 된 것입니다. 클락슨은 누리꾼들이 자신의 글에 대해 오픈 AI의 이익을 위해 쓰도록 동의한 바 없기 때문에, 보상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클락슨은 과거, 데이터 침해와 허위광고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집단소송을 낸 바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제출한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고, 위의 보도에서와 같이 미국 국방부 폭발이라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등 AI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위의 보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선도국이라는 것과 AI 규제가 후발주자들에 대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등 핵심을 잘 집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는 급성장을 이룰 분야이기 하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결과 값이 도출되어 나오는 구조에서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문제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정보 사용 미동의를 이유로 소제기까지 된 상황이라는데,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인공지능 방향을 정할 중요대목으로 보입니다. 함께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선도국이라는 면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리포트는 해외 뉴스를 다루는 부서에서 제작한 외신 리포트여서 해외 사례만을 담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들과 협조해 국내 사례와 현황 등도 유기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업무협업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7/16(일)	박세진	지난 7일 저녁 뉴스프라임에서는 개전 500일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았고, 8일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 결정 소식을 다뤘습니다. 먼저 뉴스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프라임에 패널로 출연한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전했는데, 먼저 반란을 일으켰던 와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에 대한 러시아의 조처를 전망했고,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의 심각성과 우크라이나의 대 반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현	방송 리포트는 분량이 제한되어서 제작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담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집속탄 기사의 경우도 이 폭탄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로 인한 우려지점은 무엇인지 등을 담으려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보도에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 더 이해하기 쉽고 내용이 충실한 리포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강철 비'라고 불리는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착상태에 빠진 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8일 뉴스14에서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속에 여러개의 소형 폭탄이 내장된 무기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 많은 나라가 사용을 금지한 살상무기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 120여 개국이 집속탄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유엔과 독일 등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프라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전문가를 통해 향후 전쟁 양상을 전망해 보는 유익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집속탄 지원과 관련한 보도에서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 7/23(일)	안지연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16일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이나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말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와의 중복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실업급여 중복 수급 방지보다는 이마저도 사회보장제도로 봐야할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실업급여 관련 리포트는 정부가 정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도했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의 인터뷰가 들어갈 경우 찬반 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고, 이럴 경우 당초 제작 취지와는 다소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리포트 제작 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도와 실업급여 고령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나 자영업업을 시작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현재 60대는 일하는 연령대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점에서 이 보도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의견을 전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으나 정부 당국의 입장과 고령층의 입장이 덧붙여졌다면 이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 7/30(일)	임윤주	보호출산제 입법화 진행 상황에 대해 보도한 19일 <뉴스워치>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여아의 의견 대립으로 논의가 정체된 가운데 정부는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법 전이라도 익명 출산을 돕기 위해 입산부의 신원과 영아 출생 관련 정보에 별도의 '비식별 코드' 부여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 극복 방안 없이 보호출산제를 제도화하면 오히려 '법 우산' 아래 버려지는 영아가 더 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도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 외엔 익명 출산을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해당 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한 보도였지만 현재 여아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야 할 지점 등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되었는데, 저출생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비단 미혼모의 문제만은 아닌 만큼, 해당 논의가 더 적극적이고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면밀히 보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신고 영아 출산 문제가 사회 현안인 만큼 보호출산제 문제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다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균형 있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3. 07. 0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0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대체 방안들과 문제점 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교육 행정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23일 뉴스리뷰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가 개통 이후 잇달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나이스를 통해 문서를 인쇄하면 타 학교의 시험 정답지가 출력되고 로그인 정보 등에도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스템 안정화를 목표로 6월 30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6일 보도에서도 4세대 나이스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답안 인쇄 기능 이용 시 다른 학교 시험 답안이 출력되는 등의 오류가 10건 이상 접수되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전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 기말고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새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행정역량을 당분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는 기말고사와 학기말 성적 처리 기간이 맞물려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많은 학교들은 시험지 유출되어 문제를 재출제하는 등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우려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방향 중이 아닌 학기 중에 도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 교육부의 입장도 함께 다뤘다면 보도 내용이 더욱 풍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이에 대한 보도를 할 때에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내용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속 영아시신 사건과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 등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26일 뉴스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대담은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노 교수는 이러한 비극에 대해 아동의 출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도입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노 교수에 따르면 아동의 존재를 지자체에서 알고 있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생통보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호출산제의 경우 미혼모를 보호하고 생명

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미혼모가 당당하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지원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된다면, 자녀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체성과 부모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막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출생통보제의 도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신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통해 이와 같은 비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출생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심각성이 번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짚어주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에도 지장을 줄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노인성 치매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어서 비교적 젊은 나이의 치매 환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4일 방영된 생생네트워크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65세 이전에 시작되는 초로기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인천광역시치매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초로기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대인기피 증상 해소와 위축된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로 환자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가치함께 나눔장터'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지역 주민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사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다는 소감을 전했으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치매 환자가 이런 기회를 통해 주민들과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좋다는 뿌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인천시의 초로기치매 환자들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도 전했는데, 인천시 치매관리팀장은 초로기치매 환자가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치매 안심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매가 발병하게 되면 환자들의 경우 사회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여 치매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치매가 발병한 환자들을 위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젊은 층의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짚어주었고 특정 지역이지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회 활동은 환자들의 자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로기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제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민심을 사

로잡기 위해 장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당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뉴스오늘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청년들과 만나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 발표회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에 대한 내용과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확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 지원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약 1,882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청년 관련 정책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법을 통과시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 정책에 힘을 쓰는 것은 청년층의 투표율과 표심이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제시한 청년 지원책을 단편적으로만 소개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령 발표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반응이나 정책의 현실성 여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학자금 대출 정책 변화, 민주당과의 차이점 등 발표 내용을 둘러싼 다양한 내용을 함께 다뤘다면 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해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3. 07. 09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0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최근 영아살해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윤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소제기까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달 30일 방송한 뉴스 1번지인데요, 아기 둘을 낳은 뒤 살해해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한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를 알았다는 의혹을 받은 친부는 무혐의로 판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수원 냉장고 아기시신' 사건의 피의자 30대 고모씨.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낳고는 모두 이튿날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고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영아살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데요, 영아살해죄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고씨가 주장한 낙태 비용이 부담되어 살해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은 살인방조죄로 입건했던 고씨 남편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는데요,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볼 때 남편은 '무심한 성향'이었고, 1차 범행 때 아내의 임신 사실도 몰랐고, 2차 범행 때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는데요, 냉동실에 시신이 있단 생각도 못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출산 당시 남편이 서명했던 의혹도 제기됐지만 고씨가 "자신이 대리서명했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남편 행동에 대해선 추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장례비용과 시신 안치 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남은 세 자녀를 도울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30일 뉴스센터13에서는 경남경찰청이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인 아내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집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퇴원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관할 행정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체포하고 C군 시신을 찾기 위해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의 영아에 대한 살해는 살인죄보다 감경해주고 있는데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 2명의 영아를 살해한 사건을 보면 현재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황에서 살해한 경우인데요, 본인이 주장하는 낙태비용 등의 경제적 상황이 경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5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위 사건은 부모의 입장에선 매우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주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아기를 낳았을 때, 이를 양육할 수 있게끔 경제적 부분에 대해 제도 정비를 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아이 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매우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언급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달 28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끈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후 출생통보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지난 달 30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통과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달 28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보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에 출생통보제 등 대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점이 논란인지, 또 해외상황은 어떤지를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의료계가 "분만 진료비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을 통보하는데 지자체 통보까지 하라는 건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지만, 이미 국회에선 도입 문턱을 넘기 직전이라며, 실제 이미 미국·캐나다·영국·뉴질랜드·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대부분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이들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번호가 주어지고 그걸 연동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다만,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보완제 관계란 평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도 한데요,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출생아가 성장한 뒤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탓에 독일에선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성은 정부가 정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출생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산모의 익명 출산과 출생아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 노력 중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 30일 뉴스프라이머에서는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기 여성을 위해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아이를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반론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출생통보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기에, 병원과 보건당국이 출생등록을 책임지게 된다고 하면서 부모의 신고 누락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영아살해죄가 선고된 46건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본 한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 모두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없으며,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반면, 보호출산제가 양육을 더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이를 낳아 기를지, 입양 보낼지 충분히 고민하기도 전에 익명 출산을 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국민행복카드라는 제도가 있어서 미혼모가 병원도 갈 수 있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병원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알고도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묻습니다. 여성들이 익명을 원해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아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위기 여성이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받으며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사전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지난 달 30일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위 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찬반 논의가 존재하는데요, 위 보도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쟁점에 대하여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살해되거나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특히나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도 시행 중인 내용이 이 제도의 나름 타당한 면을 뒷받침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모든 아동이 출생되고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지만,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출생하면 의료인은 아기 엄마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아기의 성별과 출생연월일 등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아기 엄마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아기 엄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지난 1일 뉴스 17에서는 생성형 AI, 챗GPT를 계기로 초거대 AI가 만들어 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동시에

각국이 규제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 지난 달 30일 뉴스에서는 미국에서 AI회사가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기자는 AI 규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5월 SNS에는 미국 국방부 청사 인근 폭발 장면이라는 사진이 올라와서 뉴욕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AI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였었다면서, 최근에는 챗GPT를 이용해 팬데믹을 발생시킬 신종 감염병을 만들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AI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14일 답변 출처 데이터 공개와 불법 콘텐츠 생성 방지 마련을 담은 AI 규제법안의 초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는데요, 한국도 AI 산업 육성과 관련한 7개 법안을 통합한 단일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선도국인데요, 부작용을 막아야하면서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두가지 과제를 함께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시장이 올해 37억 달러에서 5년 뒤 360억 달러로 10배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규제분야에서도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I 규제가 후발주자들에 대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른바 '사다리 건너차기' 성격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 30일 뉴스 01에서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이 오픈AI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인터넷상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내용으로 소 제기가 된 것입니다. 클락슨은 누리꾼들이 자신의 글에 대해 오픈 AI의 이익을 위해 쓰도록 동의한 바 없기 때문에, 보상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클락슨은 과거, 데이터 침해와 허위광고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집단소송을 낸 바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제출한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고, 위의 보도에서와 같이 미국 국방부 폭발이라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등 AI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의 보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선도국이라는 것과 AI 규제가 후발주자들에 대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등 핵심을 잘 짚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는 급성장을 이룰 분야이기 하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결과 값이 도출되어 나오는 구조에서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문제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정보 사용 미동의를 이유로 소제기까지 된 상황이라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인공지능 방향을 정할 중요대목으로 보입니다. 함께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선도국이라는 면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3. 07. 1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0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지시간 7월 5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법원에서 자살폭발 사건이 발생했고, 6일에는 리비우 지역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7일 저녁 뉴스프라임에서는 개전 500일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았고, 8일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 결정 소식을 다뤘습니다. 먼저 뉴스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프라임에 패널로 출연한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전했는데요, 먼저 반란을 일으켰던 와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근황과 향후 그에 대한 러시아의 조치를 전망했고,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의 심각성과 우크라이나의 대 반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현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강철비’라고 불리는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착상태에 빠진 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8일 뉴스14에서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속에 여러개의 소형 폭탄이 내장된 무기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 많은 나라가 사용을 금지한 살상무기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 120여 개국이 집속탄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유엔과 독일 등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 프라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전문가를 통해 향후 전쟁 양상을 전망해 보는 유익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집속탄 지원과 관련한 보도에서는 미국 정부의 결정을 불려올 파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해 “실제 진행된다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것”이라며 “인류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아갈 ‘핵 아마게돈’ 도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속탄 사용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직접 집속탄을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불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포탄 우회지원 논란도 다시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뤄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월 31일 발사한 우주 발사체 추락 잔해에 대한 36일 간의 탐색 및 인양 작전을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그간의 작전 경과를 합참의 발표에 기반해 지난 5일 뉴스포커스와 8일 한반도브리핑에서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보도에서는 군 당국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물 탐색 및 인양 작전이 7월 5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이번 작전을 통해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양한 북한 위성체 등을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을 덧붙이며,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재발사에 나설 것을 지난달 중순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의했다는 소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반도브리핑에서는 이번에 수거된 위성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군사 목적의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1m' 급, 즉, 지상에 있는 가로, 세로 1미터인 물체가 한 점으로 보이는 수준이 돼야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이번 발표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단호한 평가를 내린 것에 비춰볼 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해상도 10m급의 상업용 위성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수거된 위성 발사체는 ‘중이 인형’에 불과한 위성이라는 포스톨 MIT 명예교수의 발언과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은 북한의 정치적 쇼라는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함께 전했고, 보도 말미에는 낮은 해상도의 위성이라도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준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시청자들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배경과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군이 높은 수준의 탐색 및 인양 능력과 면밀한 분석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정찰위성 해상도의 군사적 위협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상반된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사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마약 관련 수사결과를 다뤘는데요, 먼저 지난 6일 연합뉴스TV 단독 보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액 단기 알바를 찾던 대학교 신입생이 마약 유통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평범한 학생들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대학생은 마약조직과 관련 없는 10대 대학교 신입생으로 지난 5월 구로구와 관악구 일대 수백곳을 돌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고액 단기 알바를 찾던 중 마약 유통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방학철을 맞아 고액 단기 알바

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칫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대학생들이 늘 수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뉴스리뷰에서는 중국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중국 동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감기약으로 통용되는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이 국내에서는 항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판매와 투약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약 관련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단독 보도의 경우 방학기간 대학생들이 마약 유통 범죄에 현혹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3. 07. 23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0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2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타났는데, 특히 청주 오송 지역에서는 연이은 호우에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는 17일 뉴스특보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평가했는데, 지자체장은 즉시 지하차도 교통 통제와 인근의 교통 통제 즉, 긴급통행금지나 통행제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상세히 설계해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지금과 같은 문제까지 상정해서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 보니 해당 문제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시스템조차 작동이 안되고 있는 것은 국민보호재난 관리, 주민보호 재난 관리 시스템이 풀어야 될 큰 숙제이자 지역재난관리시스템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재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책임 유무와 형사 처벌과 연결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이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여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이 드러

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오는 날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행동 요령 등의 습득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해마다 호우로 인한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사고 발생 전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안타까운 상황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재난 안전 시스템 작동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사의 원인을 밝힐 때 우리 사회에서는 책임 유무와 형사처벌 대상의 여부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에서 벗어나 재난 안전 시스템 작동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통해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주목하는 보도에서 벗어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하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른 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의 수해가 발생하면서 수해 발생 지역의 위생환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식중독, 수인성 감염병 등의 유행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17일 뉴스특보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집중 호우 기간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감염병, 알레르기, 눈병 등의 발생 가능성의 증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특히 수해지역에 수인성이나 식품 매개 감염병이 증가하는 원인은 오염된 물로 인한 것이며 설사와 구토 증상이 있거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로 세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음식은 중심부까지 익혀서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재현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교수는 음식과 물은 꼭 끓여먹고, 음식물을 상온에 한두시간 이상 놔두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조리기구는 소독하여 사용해야 하며 만약 식기 등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는 세척이나 살균이 어렵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좋고 눈병이나 피부병,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면서 수재민들은 주변 위생환경을 살피는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음식물 조리과 식기류의 청결, 개인위생 등에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인성 감염병과 알레르기 등에 대한 예방책을 다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에 포함하면서 감염병 유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한편, 수재민은 임시대피시설이나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사람들이 밀집되는 환경이 될 수 있어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집중 호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부담 규모는 커지고

있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율은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저금리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 정도인 DSR 비율로 따져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가계 빚 부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정 부분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시키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 가계 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증가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률을 낮추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예외를 줄이고 일시상환 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등의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통화, 재정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국내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과 전망을 짚어보고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여 국내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이나 DSR 규제 도입의 배경 등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졌다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국의 사례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짚어보았다면 더욱 의미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문제에 거시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의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경제 환경을 함께 다뤄보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취업활동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실직 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16일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이나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실업급여 중복 수급 방지보다는 이마저도 사회보장제도로 봐야할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경제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도와

실업급여 고령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나 자영업자를 시작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현재 60대는 일하는 연령대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보도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의견을 전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으나 정부 당국의 입장과 고령층의 입장이 덧붙여졌다면 이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07. 3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0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한 주간 안타까운 소식들이 다수 발생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뉴스 리뷰>와 23일 <뉴스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21일 <뉴스 리뷰>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과 진행한 긴급 간담회 내용을 전했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가운데, 이 부총리는 그간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지난해에만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교권도 흔들리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정당한 교육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무고죄 신설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일 <뉴스 오늘>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에 대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먼저 시의회와 도교육청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서울시의회 의장은 "인권조례 등 서울 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교육감은 "'조례 개정으로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와 서울, 광주 등 6개 시도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벌이나 두발 및 복장 규제 등 인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 안에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의 항목은 없어 교사의 생활지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지속 존재해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오히려 조례가 없는 곳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많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가령 학교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때, 학부모의 공격성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보도는 교권 침해를 막

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긴급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하고, 이어 그에 대한 반대되는 반응도 각 측의 목소리를 인용하여 잘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뉴스 말미에 기자가 언급하였듯,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해진 보도만으로는 현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들과 학생인권조례의 재조정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긴급 간담회를 전한 보도와, 학생인권조례 재조에 대한 양측 반응을 전한 보도 모두에서 드러나지 않는데요. 특히 반응 전달에 있어, 단순히 반응에 대한 언급이 아닌, 양측 모두 왜 그러한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한 인터뷰 의견이 덧붙여졌다면 더 전달력이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농어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일 <뉴스 리뷰>에서는 어민들의 피해에 집중하여 보도하였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거제시 해안가를 따라 쌓인 나뭇가지, 스티로폼, 생활 쓰레기들이 엉켜있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낙동강 하구둑 수문개방 등으로 떠밀려 온 쓰레기입니다. 쌓인 쓰레기에 어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 어민은 인터뷰를 통해 조업하는 데 지장이 많으며 고기들이 많이 죽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거제시는 자체 예산으로 떠밀려온 쓰레기를 처리하고는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아 난감한 처지입니다. 며칠째 굴삭기가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들을 퍼 올리고 있지만, 쌓인 쓰레기 양만 100톤 가까이로, 역부족입니다. 퍼 올린 쓰레기들을 담은 포대는 이미 천 포대 이상으로, 많은 인력이 함께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끊임없이 작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도심 내 피해에 대해 더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내의 거주 인구나 유동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도심 외 지역에 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인력, 장비 등이 모두 도심 대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전한 이번 보도는 더 의미 있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바닷가를 거닐며 현장의 모습을 전했는데, 쓰레기의 양이나 쌓인 규모가 기자 및 굴삭기의 크기와 비교되면서, 심각성이 더 와닿았습니다. 현재 보도된 지역 외 많은 바다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밀려온 쓰레기 뿐 아니라 부족한 지원과 인력으로 인해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많은 부분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지속 보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합뉴스TV는 이번 폭우로 인한 국가 유산이나 문화 유산에 대한 피해 역시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19일과 20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집중호우 인한 국가 유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봉화군 쌍벽당 종택과 만산고택에서는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서설당 고택에서는 배수 불량으로 지반 일부가 내려앉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19일

까지 국가유산 47건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과 전남 각 7건, 전북 5건, 충북과 강원 각 3건이었습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사 미륵전도 집중호우로 막새 기와 두 장이 탈락하는 등 파손돼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명승인 충남 공주 고마나루에서는 나무 6그루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부터 20일까지 국가 유산 피해가 59건이라 전했는데요, 이는 바로 앞에서 전달한 보도의 수치보다 하루 새 10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도는 특정 지역의 국가 유산 피해를 전하지 않고 경북, 전북, 충남 등 전국의 피해 사례들을 전달하여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보도의 비중이 피해가 큰 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도심 외 지역 역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해당 지역에 관한 관심 환기는 물론 '문화재'라는 부분에 주목하여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어민 피해 사례처럼 현장의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취재하였다면 보도의 의미가 더 크게 전달되었을 텐데요, 사진으로만 전달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보호출산제 입법화 진행 상황에 대해 보도한 19일 <뉴스워치>입니다. 보호 출산제는 여아의 의견 대립으로 논의가 정체된 가운데 정부는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법 전이라도 익명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부의 신원과 영아 출생 관련 정보에 별도의 '비식별 코드' 부여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 극복 방안 없이 보호출산제를 제도화하면 오히려 '뱍 우산' 아래 버려지는 영아가 더 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도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 외엔 익명 출산을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해당 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한 보도였지만 현재 여아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야 할 지점 등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되었는데요. 저출생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비단 미혼모의 문제만은 아닌 만큼, 해당 논의가 더 적극적이고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면밀히 보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2023년 7월 2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3년 7월 9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3년 7월 16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3년 7월 23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3년 7월 30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